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수신처	전북지역 각 언론사
(경유)	전북교육청 출입 기자
제목	<보도요청>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 여부 확인과 학생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대책 진정

1.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12일에 지역 언론을 통해 전주의 모 중학교 3학년의 담임교사가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손을 들라고 시킨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일이며 해당 학생들의 자존감과 인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늘(14일)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해당 학교의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을 공개적으로 조사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진정했습니다. 상세한 진정 내용은 첨부한 진정서에 있으니 각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진정서 전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담당 : 채민

시행 : 15-09-1 (2015. 4. 14)

[560-0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전화 063-278-9331

전송 063-278-9332

공동대표 : 문규현, 송기춘

접 수 : (2015. .)

누리집 <http://www.onespark.or.kr>

E-mail:onespark@chol.com

진 정 서

전북일보 인터넷지면 4월 12일 기사 등을 보면 전주시의 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한 부모·저소득층 학생의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조회시간에 “한 부모가정·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고,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는 말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조사가 실제로 있었다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이하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일이며, 교사의 인권의식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의 자존감과 인권이 침해되는 등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여러 가정환경 중에서도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을 지목하여 공개 조사를 진행한 점은 특정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밝히기 꺼려하는 가정환경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차별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의 교사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조례의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제14조 제1항에서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번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신상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기록되었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자의든 타의든 수집하고 확인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전북교육청 역시 각 급 학교에 <2011 조손가족 학생 및 한 부모 가족 학생현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지역사회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뢰의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와 개인상담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자율에 의해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뤄져야 하며, 교사에 의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문서화되어 저장되지는 방식은 가능한 지양해야 하며, 피치 못한 상황으로 저장되었다면 학생들의 전학 및 진학 등에 따라 반드시 삭제되거나 파기되어야 합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교사에게 학생들에게 사과와 정보인권 보장을 약속을 하도록 주문하고, 학생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학기 초에 교사의 강압에 의해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업무에 있어 학생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참고할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